

#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조진만 (Cho, Jin-man) \*  
(E-mail : jmcho7777@hanmail.net)  
최준영 (Choi, Jun-young) \*\*  
(E-mail : junchoi88@inha.ac.kr)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19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5일

\* 학위취득대학 : 연세대학교  
현직: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 학위취득대학 :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현직: 인하대학교 조교수

#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를 18대 총선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민주시민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을 다양한 차원에서 조작화하여 이것이 선거운동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연구결과,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정당친밀감, 정보 취득 의지, 정치효능감이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민주주의 원칙 동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 정치식도는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유권자의 이념만이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한국, 선거, 선거운동, 민주시민

\* 본 논문은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9년 국제학술대회 「2010년 지방 선거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발표논문 중 일부 수정한 것임.

## I. 서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민주적 제도와 절차들이 도입되고 운영된 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최장집 2002).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도모해야 하는 오늘날 한국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많은 학술적 논의점을 제공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의 모색이 긴요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주화 이후 왜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넘어 민주적인 절차와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는 정치문화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Almond and Verba 1963; Diamond *et al.* 1997). 즉 민주적인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주체들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대하여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일상화되고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의식 있고 능동적인 구성원이 부족하다면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요원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영태 2006, 193-194).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정치적 구성원은 대표자와 위임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장동진 2005). 먼저 대표자는 선거에서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으로서 이들 정치인이 어떠한 자질과 품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 다시 말하면 리더십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공고화 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임자의 경우 선거에서 자신

의 선택을 통하여 정치적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일반 시민들로서 이들이 정치적 지식, 관심, 참여 등과 관련한 민주적 의식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공고화 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인 정치인과 위임자인 일반시민이 민주주의와 관련한 자질과 능력, 그리고 품성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에서 대표자는 위임자들의 선택을 토대로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호와 요구를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대표자인 정치인의 민주주의보다 위임자인 일반시민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재선 또는 당선에 최고의 목적인 상황(Downs 1957) 속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정적인 수단의 동원—예를 들어 네거티브 캠페인 등—도 마다하지 않는 행태를 자주 보인다(Martin 2004; Swint 2005). 그리고 이에 대한 통제와 방어는 정치인들 스스로의 자정능력보다는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한국의 유권자와 관련하여 민주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효과들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요구되는지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이 선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8대 총선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민주시민의식과 정치현상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특별히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정책 등의 문제를 둘러

싼 공정하고 경쟁적인 설득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선거운동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은 소극적인 참여 형태인 투표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형태인 선거운동에서 보다 잘 발휘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민주시민의식과 정치적 참여의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투표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를 간과한 채 법·제도적 차원이나 정당과 후보자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조진만 2009). 그러므로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작업을 의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한국적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이 선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 진성당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규제적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지속적으로 제한받고 있다(조진만 2006). 뿐만 아니라 부동층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선거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이 선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적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긴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첫째, 민주시민의식의 다의미성과 이로 인한 개념적 모호함을 극복하고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화와 조작화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정립하고 있다. 셋째,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한 경험이 있는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를 분류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수행하여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이 선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넷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이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대중(*demos*)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사회의 다양한 선호들이 공론화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대표성·정통성·안정성 문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Powell 1982; Verba and Nie 1972).

이 때 문제는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합리적 유권자의 경우 정치적 관심과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지는 않다는 점에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유권자가 특정의 정치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이 혜택(*benefit*)보다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표 참여의 경우 합리적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투표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당선됨으로써 받게 되는 혜택이 크다고 생각할 때 투표를 하게 된다(Downs 1957).

하지만 합리적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투표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당선됨으로써 받게 되는 혜택은 집단적이고 간접적이다. 더욱이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은 거의 영점(*nil*)에 가깝기 때문에 기권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투표의 역설(*paradox of*

voting)이 존재하게 된다(Ferejohn and Fiorina 1974).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적 참여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은 “합리적 유권자는 정치적 참여의 유인을 갖지 못하면서도 왜 실제로는 정치적 참여를 하게 되는가?”라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투표 참여에 있어서 시민적 의무(civic duty)의 문제를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한 라이커와 오데슈(Riker and Ordeshook 1968)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이커와 오데슈는 합리적 유권자의 투표 역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투표 참여에 따른 비용과 혜택 외에 시민적 의무라는 항목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이들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는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 혜택과 시민적 의무를 더한 효용과 비교하여 적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지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투표 참여는 시민적 의무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도 결국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그 양적·질적 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의식이 부족한 이기적인 유권자들만 존재한다면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기권을 하는 것이, 그리고 각종 정치적 쟁점과 정책들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이에 대하여 무지한(rationally ignorant) 행태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라이커와 오데슈가 시민적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시민적 의무를 유권자가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구체화시켜 설명하였다(Riker and Ordeshook 1968, 28): 첫째, 민주주의 전통을 준수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둘째,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심

(allegiance)을 확인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셋째, 자신의 정당선호를 확인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넷째, 자신이 정치적 결정에 대한 정보 취득 행위를 즐기고 실제로 그 정치적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다섯째, 정치체제에 대한 효능감을 확인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민주시민의식은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라이커와 오데슈의 시민적 의무에 대한 주장이 아무런 문제없이 민주시민의식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라이커와 오데슈의 주장은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라이커와 오데슈의 시민적 의무와 투표 참여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민적 의무는 민주시민의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와 선거운동 모두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라이커와 오데슈의 시민적 의무와 투표 참여간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토대로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을 정립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 전통을 준수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유권자의 동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유권자란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를 의미한다. 물론 민주주의 원칙과 규범은 개인의 존엄성 보장,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시,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자에 대한 보호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포괄적인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을 경우 이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범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내는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연구가설 1: “민주주의의 원칙과 규범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이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 현실에 대하여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만큼의 충성심을 보여줄 의지가 있는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체제에 대한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에 기반한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다양한 정치적 활동의 참여를 이끄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내에서도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유권자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치체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유권자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의 문제는 선거운동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연구가설 2: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신의 정당선호를 확인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것은 결국 특정 정당과 친밀감(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특징을 보일 가

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정당은 시민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Schattschneider 1942). 즉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각 정당은 정책, 소속 정치인, 당원 조직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자원들을 마련하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통하여 치열한 설득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Hillygus 2005; Jackson 1997). 이 때 특정 정당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정당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적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종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Budge et al. 1976; Campbell et al. 1960; Finkel and Opp 1991). 즉 특정 정당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정당의 정책적 입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잘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홍보하고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특정 정당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연구가설 3: “특정 정당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치적 결정에 대한 정보 취득 행위를 즐기고 실제로 그 정치적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은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정치적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 취득의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의사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정치적 정보 내지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민주시민의식이 높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투표와 같은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을 놓고 민주시민의식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시민의식은 높지만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갖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기권을 정치적 표현의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참여 여부를 민주시민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유권자가 각종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감수할 용의가 있고, 이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정치적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민주시민의식은 높은 특징을 보이게 되고, 선거운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연구가설 4: “정치적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 취득의 비용을 보다 많이 감수하는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 연구가설 5: “정치적 지식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정치체제에 대한 효능감을 확인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라이커와 오데숙은 정치적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객관적 영향력 내지는 확률보다는 주관적 판단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유권자 한 표의 객관적인 가치는 동일하지만 각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가 정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투표 참여 문제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의 개념을 통하여 설명이 되어 지는데(Abramson and Aldrich 1982; Powell 1986)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 연구가설 6: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를 좀더 적실성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이념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이념의 경우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시켜주는 고리(Ware 1996, 17)로서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선거결과로 인한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좌파(진보) 정당이나 우파(보수) 정당 중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이념적 차원의 정치적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 하에서 좌파(진보) 세력 또는 우파(보수) 세력 중 어느 한 세력도 정치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도적 유권자들의 중위선호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게 된다(McDonald and Budge 2005; McDonald et al. 2004). 그러므로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와 비교하여 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Lazarsfeld et al. 1948; Verba and Nie 1972;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의 주장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도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고,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 Ⅲ. 자료, 모델, 조작화

본 연구는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18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18대 총선 직후인 2008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성인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의 표집방법은 동별 성인 인구수에 의한 다단계 층화추출법 (*Multi Stage Stratified Sampling*)이 사용되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pm 2.5\%$ 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대인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론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실적으로 설문조사 비용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용과 자료 접근의 문제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차원에서 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 다른 선거여론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이 다수 존재하고, 선거운동 여부를 직접적으로 질문한 설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용한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앞서 정립한 연구가설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일단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Y는 가변수로서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그런 경우에는 1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종속변수를 코딩하였다. 이 밖에 본 연구에서 설

정하고 있는 독립변수들이 어떻게 조작화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ext{모델: } Y = a + \beta_1^* \text{민주주의 원칙 동의} + \beta_2^* \text{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 + \beta_3^* \text{정당친밀감} + \beta_4^* \text{정보 취득 의지} + \beta_5^* \text{정치식도} + \beta_6^* \text{정치효능감} + \beta_7^* \text{이념} + \beta_8^* \text{성별} + \beta_9^* \text{연령} + \beta_{10}^* \text{교육수준} + \beta_{11}^* \text{소득수준} + \varepsilon$$

첫째, 민주주의 원칙 동의는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형태보다도 낫다”라는 주장에 얼마나 찬성하는가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1, 대체로 찬성하지 않는다=2, 대체로 찬성한다=3, 매우 찬성한다=4”로 민주주의 원칙 동의를 코딩하였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는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하여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세 가지 설문을 조합하여 조작화하였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권자가 한국의 민주정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현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선거가 실제로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각각 4점 척도로 질문한 설문을 조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정치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2, 대체로 만족한다=3, 매우 만족한다=4”로 코딩하였다. 한국에서 현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1, 별로 존중되지 않았다=2, 약간 존중된다=3, 매우 존중된다=4”로 코딩하였다. 한국의 선거가 실제로 유권자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1, 별로 잘 대변하지 못한다=2, 상당히 잘 대변한다=3, 매우 잘 대변한다=4”

로 코딩하였다. 그런 다음 이 세 변수의 수치를 합한 지수를 산출하여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를 조작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는 최소 3점에서 최대 12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당친밀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고 있는가의 여부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특정 정당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0으로,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다.

넷째, 개인이 정치적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 취득의 비용을 얼마나 감수할 의사가 있는가는 유권자가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종이신문)이나 TV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질문한 두 가지 설문을 조합하여 정보 취득 의지는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 두 질문에 대하여 “이용하지 않는다=1,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이용한다=2,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용한다=3, 매일 이용한다=4”로 코딩한 후 그 수치를 합하여 정보 취득 의지를 조작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정보 취득 의지는 최소 2점에서 최대 8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유권자가 정치영역의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 취득 비용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치지식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 설문을 조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인지, 여당은 어느 정당인지, 그리고 국무총리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세 가지 설문에서 유권자가 “정답을 말하였을 경우=1, 그리고 오답/모름/무응답인 경우=0”으로 각각 코딩하여 그 합을 정치지식도로 조작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정치지식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정치효능감의 경우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설문을 조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누가 권력을 잡아도 별 차이가 없다” 1점으로부터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5점까지로 질문한 설문과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부터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5점까지로 질문한 설문을 조합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정치효능감은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이념은 좌파(진보) 0점에서 우파(보수) 10점 사이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평가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와 비교하여 우파(보수) 또는 좌파(진보)의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유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작화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념의 중간값인 5점을 기준(0점)으로 이로부터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로 갈수록 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작화하였다. 그러므로 이념은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 중도로부터 멀어지고,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은 남성은 0으로 여성은 1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유권자의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재학 및 졸업=4”로 코딩하였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100만원 미만=1, 100만원~149만원=2, 150만원~199만원=3, 200만원~249만원=4, 250만원~299만원=5, 300만원~349만원=6, 350만원~399만원=7, 400만원~449만원=8, 450만원~499만원=9, 500만원 이상=10”으로 코딩하였다.

#### IV. 분석

<표 1>은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일단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00)는 점은 본 연구의 모델이 적합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모델은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를 설명함에 있어 83.1%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18대 총선 유권자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p)	Exp(β)
절편	-6.053(1.528)	0.000	0.002
민주주의 원칙 동의	0.028(0.182)	0.877	1.028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	0.015(0.124)	0.904	1.015
정당친밀감	0.805(0.264)	0.002	2.237
정보 취득 의지	0.331(0.081)	0.000	1.393
정치지식도	-0.209(0.198)	0.291	0.812
정치효능감	0.147(0.065)	0.024	1.158
이념	0.287(0.081)	0.000	1.333
성별	-0.251(0.266)	0.346	0.778
연령	0.004(0.011)	0.683	1.004
교육수준	0.144(0.210)	0.491	1.155
소득수준	0.053(0.054)	0.327	1.054
-2로그우도		432.495	
카이제곱		81.700(유의확률=0.000)	
사례수		532	
적중률		83.1%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정당친밀감, 정보 취득 의지, 정치효능감이 유의확률(p) 0.01과 0.05 이하 수준에서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민주주의 원칙 동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 정치 지식도는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에는 이념만이 유의확률 0.01 이하 수준에서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직접 설문한 것을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8대 총선 유권자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 정부형태가 다른 어떤 정부형태보다도 낫다는데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이 8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유권자의 동의 수준은 이에 대한 좀더 다각적인 차원의 설문항을 마련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 현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한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현실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최소 3점과 최대 12점 사이에서 그 중간 지점인 7점과 8점 사이에 존재하는 사례수의 비율이 73.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일정 수준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셋째, 특정 정당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18대 총선에서 더욱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유의확률 0.0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당친밀감의  $\text{Exp}(\beta)$ 는 2.237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18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두 배가 넘는 확률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정 정당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 정당에 대한 정보력과 지지도, 그리고 선거에서 그 정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욕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정보 취득 의지와 관련하여 유권자가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종이신문)이나 TV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자주 이용할수록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유의확률 0.0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앞서 연구가설을 정립할 때 지적한 바 있듯이 정치적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 취득의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의 경우 민주시민의식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이것이 정치적 참여를 이끄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매체들이 공공문제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독자들이 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지만 정치적 지식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오히려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치지식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정치적 지식을 질문한 설문들이 비교적 평이하았기 때문에 빈도분석 결과 세 질문에 대하여 모두 정

답을 말한 응답자의 비율이 50.3%나 되었고, 모두 오답을 말한 응답자의 비율이 3.8%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유권자의 정치지식도는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설문들과는 차별화된 설문들을 개발하여 측정 한 후 여타 정치현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유의확률 0.05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가설을 정립할 때 지적한 바 있듯이 이것은 유권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여부가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의 경우 각 정당의 정책이나 선거쟁점 등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여 다른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파하려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밖에 통제변수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이념과 관련하여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좌파(진보) 또는 우파(보수)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18대 총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유의확률 0.01 이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징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서 연구가설을 정립할 때 논의한 바 있듯이 이념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경우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선거결과를 감수하는데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Buchanan and Tullock 1962)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머지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정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통제변수들 중 18대 총선의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투표 참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왜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

왔는데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쉬운 정치참여 행태인 투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정치참여 행태로 간주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특징이 일정 수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영향으로 선거운동에서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선거운동 동원 대상으로 사회적 진출과 활동이 적은 여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를 여부는 향후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연령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의 선거에서 부각되고 있는 세대효과(강원택 2003, 256-333; 최준영·조진만 2005)로 인한 코호트(*cohort*) 세대 내 선거운동의 활성화가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특징으로 인하여 전 연령대의 참여 부진이 반영된 결과인지를 향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IV. 결론

민주시민의식은 정치참여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은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 그리고 유권자 수준의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경험적 고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18대 총선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고찰해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라이커와 오테슈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적인 시민적 의무의 개념을 토대로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을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동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평가, 정당친밀감, 정보 취득 의지, 정치지식도,

정치효능감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하는 선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18대 총선 사례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결과,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정당친밀감, 정보 취득 의지, 정치효능감이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민주주의 원칙 동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 정치지식도는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설정한 독립변수들 중 유권자의 이념이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않고, 기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한계와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높은 수준의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지지하고 이의 유지와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민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실 속에서 체감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에서의 민주주의가 괴리된 모습을 보이는 국가에서 구성원들은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유인을 갖기 힘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평

가가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하여 크게 만족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둘째, 정당의 정치활동은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과 정치적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위축된 정당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당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로서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17대 총선에서 규제 중심적인 정치관계법이 채택됨에 따라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 부분 축소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정당 스스로도 그 역할과 기능의 강화에 걸맞게 정책 중심의 경쟁과 진성당원의 확보 노력 등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매체들이 공공문제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독자들이 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유권자가 정치적 결정에 요구되는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을 경우 민주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유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정치적 활동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적 지식이 많다는 것이 민주시민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종 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식과 정치적 참여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식의 확대를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정치적 효능감이나 관심도의

제고를 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각급 차원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식과 정보의 전달보다는 정치적 효능감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이념은 민주시민의식과 정치참여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갖는 장점인 표현의 자유와 다원성 인정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상과 입장의 발전적인 경쟁을 보장해 준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편향적 이념체제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이념적 경쟁을 보장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보다 많은 민주시민들을 보유할 수 있고, 더욱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중도적인 관점과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좌파(진보)와 우파(보수)의 차별화된 관점과 방향에서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개인이 자신의 선호하는 입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도 중립적인 국가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차별성이 뚜렷한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으로 좀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물론 이 때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식이 부족할 경우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매우 첨예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이념적 경쟁으로부터 파생되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감내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관용의 의식이 체화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 < 참고문헌 >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김영태, 2006,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당원교육의 중요성과 전략.”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1집 2호: 193-210.
- 장동진, 2005, “한국민주정치와 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자유주의적 논의.” 『사회과학논집』 제36집: 147-169.
- 조진만, 2009, “어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가?: 18대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61-85.
- 조진만, 2006,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관점에서 본 정치관계법 개정의 효과: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4집 2호: 150-185.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최준영 ·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375-394.
- Abramson, Paul R. and John H. Aldrich, 1982, "The Decline of Electoral Participation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6: 502-521.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uchanan, James M.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udge, Ian, Ivor Crewe, David Fairlie. eds, 1976, *Party Identification and Beyond*. New York: Wiley.
- Camp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amond, Larry, Marc F.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eds, 1997,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Theme and Perspectiv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25-536.
- Finkel, Steven E. and Karl-Dieter Opp, 1991, "Party Identification and Participation in Collective Political Action." *Journal of Politics* 53: 339-371.
- Hillygus, D. Sunshine, 2005, "Campaign Effects and the Dynamics of Turnout Intention in Election 2000." *The Journal of Politics* 67: 50-68.
- Jackson, Robert A, 1997, "The Mobilization of U.S. State Electorates in the 1988 and 1990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9: 520-537.
-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elen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rtin, Paul S, 2004, "Inside the Black Box of Negative Campaign Effects: Three Reasons Why Negative Campaigns Mobilize." *Political Psychology* 25: 545-562.
- McDonald, Michael D. and Ian Budge, 2005, *Elections, Parties, and Democracy: Conferring the Median Mand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cDonald, Michael, Silvia Mendés, and Ian Budge, 2004, "What Are Elections For? Conferring the Median Mandat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1-26.

Powell, G. Bingham, 1982, *Contemporary Democracies: Participation, Stability and Viol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1986, "American Voter Turnout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0: 17-43.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25-536.

Schattschneider, E. E., 1942, *Part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Rinehart.

Swint, Kerwin C, 2005, *Mudslingers: The Twenty-Five Dirtiest Political Campaigns of All Time*. Westport: Praeger.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are, Alan, 199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부록

<부록 1> 기술통계

항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선거운동 여부	981	0	1	0.18	0.38
민주주의 원칙 동의	912	1	4	2.89	0.69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	890	4	12	7.47	1.02
정당친밀감	933	0	1	0.41	0.49
정보 취득 의지	952	2	8	5.07	1.74
정치지식도	1000	0	3	2.34	0.79
정치효능감	946	2	10	7.60	2.32
이념	786	0	5	1.83	1.63
성별	1000	0	1	0.51	0.50
연령	1000	19	89	42.97	15.17
교육수준	969	1	4	3.24	0.94
소득수준	827	1	10	5.13	2.55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s' Perception on Civic Duty and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Campaigns

Cho, Jin-man  
(Inha University)  
Choi, Jun-young  
(Inha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s' perception on civic duty and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campaigns by using the survey data for the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This study develops independent variables to measure the concept of civic duty discussed in Riker and Ordeshook. By using the OLS analysis results, we identify the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voter participation in election campaigns.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party affinity, the willingness to obtain political information, and political efficacy significantly influenced voter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mpaigns. However, the level of consensus on democratic principles, the evaluation on the realities of Korea's democracy, and political knowledg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 intensity of ideology was the only variable that induced voters to actively participate the election campaigns.

**Keywords :** Korea, Election, Electoral Campaign, Civic Duty